

칼럼

시대의 화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최근 최대의 화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 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 모두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단순 활용을 뛰어넘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독창적으로 가공·재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필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면 항상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건설산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합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 때문에 태동기부터 종합건설업체인 원수급자와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인 간의 전문화·분업화는 필수 불가결했다. 전문화·분업화는 건설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수직적 하도급 구조가 30여 년 간 지속되다 보니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각종 폐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110조원 정도의 건설 공사가 발주되지만 국내 시장의 52.2%를 상위 5%의 대형 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부의 재분배'와 '원칙과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 제도도 부가 재분배되고, 원칙과 정의가 살아 있는 제도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대규모 국책사업보다는 '생활 밀착형 SOC' 공사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생활 밀착형 SOC란 도시 내 교통 인프라 확충, 낙후 지역 지방도

로 포장,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상수도 개선, 중소 하천 정비 및 재해·재난 방지시설 설치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소규모로 발주될 수 있으므로 지역 중소 업체의 수주난을 해소시켜 부의 재분배를 꾀할 수 있다.

둘째, 표준품셈을 합리화하고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실적공사비와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한 품셈을 적용하며, 입찰에서는 건설업체들의 무한 가격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품셈은 현장 여건, 작업 조건 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제도는 초저가 하도급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건설시장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하도급 대금 누락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면서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놓인 전문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전문건설업계에 필요한 것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혁신적인 열정이다. 